

제224회 임시회  
광진구의회

# 서울특별시 광진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안 심사보고서



2019. 3. 20.

기획행정위원회  
전 문 위 원

# 서울특별시 광진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제 1511호
----------	---------

2019. 3. 20.  
기획행정위원회

##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 2019. 3. 5.
- 나. 회부일자 : 2019. 3. 11.
- 다. 상정일자 : 2019. 3. 14.

## 2. 제안설명

가. 제안설명자 : 최한철 기획경제국장

### 나. 제정이유

민과 서울특별시 광진구가 공동으로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평가하는 구정 운영 방식 및 체계 등을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광진구민의 구정참여를 통한 민주주의 가치 실현에 기여하고, 지속가능한 지역사회의 발전 및 구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 다.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민관 협치의 기본 원칙에 관한 규정(안 제1조 ~ 제3조)
- 구민의 권리와 의무 및 구청장의 책무 규정(안 제4조 ~ 제5조)
- 광진구협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 제7조 ~ 제16조)
-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계획과 실행계획에 관한 규정(안 제17조)
- 민관협치 협약에 관한 규정(안 제19조)
- 관련기관 지원·협력, 지역사회 민관협치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21조 ~ 제23조)
-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교육, 이행상황 공표 등(안 제24조 ~ 제25조)

## 라. 참고사항

- 관계법령: 「서울특별시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
-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 입법예고 (2019. 2. 7. ~ 2. 27.)결과: 협치조정관 제도 반영

### 3. 전문위원 검토의견 (전문위원 김기영)

- 본 조례안은 2019년 3월 5일 광진구청장이 제출하여 2019년 3월 11일 기획행정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안건임.
-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기반으로 다양한 구정참여를 통한 민주주의 가치 실현에 기여하고, 실효성 있는 협치체계를 구축하여 지역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려는 협치의 법적·제도적 기반을 조성하고자 제안되었음.
- 서울시에서는 2016.9.29. 「서울특별시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의 제정을 시작으로 2016년 12월 도봉구, 2017년에는 금천구 등 7개구, 2018년에는 관악구 등 7개구, 2019년에는 강북·중랑구가 조례를 제정하여 활발하게 협치 구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는 7개 지자체에서 조례를 제정한 것으로 파악됨. 단, 특정 분야별 협치 조례<sup>1)</sup>는 다수 제정되어 운영되고 있음.

#### 조례 제정 현황

-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 조례」 서울시 제정현황 : 서울시 및 17개구 (광진구 등 8개 자치구는 제정 안됨, 68% 제정)
-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 조례」 (명칭상이) 전국 제정 현황 : 6개  
※ 광역(경기도, 충청남도), 기초(광명시, 안산시, 수원시, 강원 양구군)

1) 예: 대구·광주 달빛동맹 민관협력 조례,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조례,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조례 등

○ 주요 개정내용은

- **안 제2조**에서는 “민관협치”, “협치조정관” 등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고 있는데, “민관협치”의 개념은 서울시 및 타 자치구가 대동소이하며 특이사항 없음. 다만, 자치구는 민관협치사업에 대한 조정·자문의 역할을 하는 사람을 “협치조정관”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서울시의 경우 “협치자문관”으로 규정하여 다소 차이가 있음. 협치 조정관은 그 역할이 자문에 그치지 않고 갈등의 조정까지 하는 것으로 보다 넓은 의미의 역할 정의로 해석됨.

▶ 서울시 조례 규정 비교

서울시: 제2조(정의) 제2호	광진구: 제2조(정의) 제2호
2. “협치자문관”이란 민관협치 사업 전반에 대한 자문을 위해 「서울특별시 민가전문가의 시정 참여 및 지원에 관한 규칙」에 따라 시장이 위촉한 민간 전문가	2. “협치조정관”이란 민관 협력을 촉진하고, 민관협치 사업 전반에 대한 조정·자문의 역할을 하는 사람

- **안 제3조**에서는 민관협치의 기본원칙은 자발성과 수평적 협력관계를 기반으로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다고 선언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 **안 제4조**에서는 구민은 누구나 구의 정책결정·집행·평가에 참여할 권리가 있고, 참여에 대한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구민의 구정참여를 보장한다는 측면에서는 의미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안 제7조**부터 **제16조**에서는 민관협치 체계의 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광진구협치회의의 운영과 관련하여 규정하고 있음.
- **안 제9조**에서는 협치회의의 의장을 2명으로 하고 “의장은 구청장과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된 위원이 공동의장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공동의장을 통해 민관협치의 취지를 강화**한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 또한, 전체위원은 40명 내외로 하고 위촉직 위원중 구의원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민관협치가 단순히 행정과 민간만이 주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민”의 대표라 할 수 있는 “의회” 역시 협치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하여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됨. 다만, 협치회의에 참여할 구의원의 수를 명시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협치회의의 구성 현황

(2019.2월기준)

연번	구분	총인원		구의원수	
		조례규정	실제인원	조례규정	실제인원
1	관 악	40명 이내	27	인원규정X	2
2	금 천	30명 이내	30	2	2
3	도 봉	25명 이내	25	인원규정X	2
4	동대문	30명 이내	29	2	2
5	서대문	35명 이내	35	2	2
6	성 동	30명 이내	30	인원규정X	-
7	영등포	25명 이내	25	2	2
8	은 평	30명 이내	29	2	2
9	강 동	30명 이내	30	2	2
10	강 서	30명 이내	29	인원규정X	2
11	노 원	30명 이내	29	2	2
12	동 작	30명 이내	29	2	2
13	성 북	20명 이상 25명 이내	24		2
14	양 천	30명 이내	29	인원규정X	2
15	종 로	25명 이내	20	4명 이하	-
16	강 북	35명 이내		4	
17	중 랑	30명 이내		2	

- 안 제11조에서는 위원회의 해촉사유를 규정하고 있고, 제13조에서는 회의 운영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15조에서는 전문기관 또는 관련 단체의 의견청취를, 안 제16조에서는 수당 지급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안 제17조**에서는 정책과정의 구민 의견반영 및 참여확대를 위하여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있는데, 외부여건 변화에 따른 각종 시책과 지원 환경의 변동성을 억제해 안정적인 민관협치 여건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임. 서울시 및 자치구 대부분이 기본계획 수립에 있어서는 유사하나, 서대문구의 경우 기본계획 수립 이후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고, 강서구의 경우는 기본계획을 협치회의에서 협의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 **안 제18조**에서는 민간전문가를 협치조정관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이는 의견제출 기간동안 접수된 의견을 반영하여 신설한 내용으로 빠른 속도로 변화하는 시대적 가치와 협치 환경을 반영하기 위하여 민관협력에 관한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를 채용하는 것이므로 일정 부분 의미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 우리구보다 먼저 협치조례를 제정한 17개구에서는 **성북구를 제외하고 모두 ‘협치조정관’ 제도를 두고 있으며**, 은평구는 협치조정관 제도를 강행규정으로 하고 있고, 종로구는 민관협치 업무 담당과장을 협치조정관으로 하는 점의 특색이 있음.
  
- **안 제19조**에서는 정책 추진 시 이해관계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명시한 민관협치 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정책 추진 시에 **이해관계자 간의 협약 체결로 행정 갈등을 해소**하는 긍정적인 기능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안 제21조부터 제23조**는 구민참여와 역량강화를 지원하는 민간위탁 기관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과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의 근거를 정하고 있음.

- 최근 시민사회 주체들의 참여가 증가하고 있으나 여전히 일반시민의 참여는 미흡할 뿐만 아니라 정책과정에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주체들의 다양성과 시민대표성이 부족한 것이 현실임. 이에 초반 **민관협치의 정착을 위해서는 다양한 교육, 간담회, 조직 구성 등의 기반 조성 비용이 투입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 행정적, 재정적 지원<sup>2)</sup>이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사료됨.**
- **안 제24조 및 제25조**에서는 협치역량 개발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민관협치 추진상황을 구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도록 하였는데, 민관협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일정 부분 의미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 종합 검토의견

- 본 조례는 고령화 · 실업 · 도시재생 등 복잡 · 다양한 도시문제를 민 · 관이 함께 해결하기 위한 대안적 방식으로 ‘협치’가 등장함에 따라 민관협치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민관협치의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됨.**
- 다만, 명령 · 다수결 · 책임성에 의해 운영되는 “행정”과 자율 · 참여 · 다원성에 의해 움직이는 “민간”의 운영방식이 상이하므로 우리구보다 먼저 조례를 제정하고 제도를 시행한 타구의 사례를 참고하여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 또한, 주민자치회, 마을공동체, 시민참여예산, 각종 위원회 등 현재 진행 중인 다양한 사업들을 민관협치 사업으로 녹여내는 종합적인 정책을 마련하여 주민이 직접 우리구의 문제 해결에 참여할 수 있는 진정한 협치기반 조성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2) 민관협치는 서울시 중점사업 중 하나로 지역사회혁신계획 수립 자치구에 대하여 10억 내외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음. 2018년 기준 15개구가 참여하고 있는데, 서대문구의 경우 10개사업(14억여원)을 추진하였고, 이 중 시비가 10억5천으로 전체 예산의 75%를 차지함.

#### **4. 질의 및 답변요지**

- 회의록 참조

#### **5. 토론**

- 회의록 참조

#### **6. 심사결과**

-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수정가결(붙임 참조)

####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 심사결과에 따른 수정조례안

조례안	수정조례안
<p><b>제9조(구성)</b> ① 협치회의는 의장 2명을 포함하여 <u>40명 내외</u>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② ~ ③ (생략)</p> <p>④ 위촉직 위원은 민관협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p> <p>1. (생략)</p> <p>2. <u>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u></p> <p>3. ~ 4. (생략)</p>	<p><b>제9조(구성)</b> ① ----- ----- <u>30명 이내</u> ----- ----- <u>단, 민간위원이 70% 이상이어야 한다.</u></p> <p>② ~ ③ (현행과 같음)</p> <p>④ ----- ----- ----- ----- -----.</p> <p>1. (현행과 같음)</p> <p>2. <u>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u> ----- <u>구의원 2명</u></p> <p>3. ~ 4. (현행과 같음)</p>
<p><b>제17조(민관협치 활성화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b> ① 협치회의는 정책과정에서의 구민 의견 반영 및 참여 확대를 위한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u>수립한다</u>.</p>	<p><b>제17조(민관협치 활성화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b> ① ----- ----- ----- ----- <u>수립하고,</u> <u>구의회에 보고한다.</u></p>
<p><b>제18조(협치조정관)</b> 구청장은 민관 협력을 촉진하고, 민관협치 사업 전반에 대한 조정·자문을 위하여 민관 협력에 관한 경험이 풍부한 <u>민간전문가를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에 따라</u> 협치조정관으로 채용할 수 있다.</p>	<p><b>제18조(협치조정관)</b> ----- ----- ----- ----- <u>민간전문가를</u> ----- -----.</p>